

“코로나19 위기 속 주민 안전 위해 최선을”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사



이강영
남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설레임의 계절이지만, 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리는 신종 바이러스로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생활 불편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는 박재범 구청장님의 지휘아래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행사취소, 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과 조직적인 방역단 활동은 물론 부산 최초 보건소 의료진 대구파견, 전 주민 마스크 무료배부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한발 빠른 움직임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장, 놀이터, 주택가 등 취약지역 구석구석 방역기를 메고 상심한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지역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함께 발 벗고 나선 민·관·군·경 모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보내주시는 사랑과 노고에 뜨거운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약 960억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조차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늘 현장의 소리를 듣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내 장기화에 대비해 연일 비상근무로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도 차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아직 백신 없는 바이러스는 두려운 존재지만 사스, 메르스를 거치며 발전해 온 질병대응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조례안 원안 가결

허미향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 전원 발의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상임위원회별 안전심사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폐회기간 중 3월 10일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회기 중인 3월 1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3월 17일에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다. 3월 18일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구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5,764백만원 증액된 514,033백만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이날 박미순 의원은 ‘체계적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비를 위하여’, 박구슬 의원은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정책안’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조정, 감염병 대응, SOC 및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란2동

제284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3월 31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28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날 임시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

공영주차장 조성] (원안가결)－고치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감란동 3-47번지 등 3필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중 감란동 3-211번지 등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20면→24면), 주차장 이용시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면 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원안가결)

－용호동 221-1번지 일원은 이기대면합시장이 인접하여 도로의 상시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후 주택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4동 공영주차장 조성] (원안가결)

－용호동 485-2번지 일원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허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

2017년도 남구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용호1동7블록과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후 건물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협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대책인 구민안전보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자 함.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원 발의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있었다.

박미순 의원은 9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예방사업 내용’, ‘질병정보모니터링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근우 의원(대표발의) 외 9명의 의원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협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안전보협 가입 대상 및 재정지원’,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피해신고·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보



박미순 의원



김근우 의원



허미향 의원

박미순 의원 남구 감염병 예방 조례안

김근우 의원 구민안전보협 운영 조례안

허미향 의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협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례안들은 3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어 3월 19일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제28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있었다.

허미향 의원 대표발의로 남구의

회 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재난 및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과 구민 생활안정 및 재난 극복을 꾀하고 있다.

위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어 제2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5분 자유발언

신종코로나 감염증 체계적 대비를

역량이 하루에 2개동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 일주일에 1~2회씩 동네 곳곳을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과 소독이 필요한 곳이 많아 자칫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체계적 방역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한정된 방역인력과 자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가 축소된 일부 시설 등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홀로어르신, 장애인, 기초수급가정 등 취약계층 방역작업에 남구청이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중심 공적방역은 현행처럼 다중이용장소, 시설위주 방역으로, 동별 협력단체 중심의 사적방역은 취약계층 위주의 방역으로 이원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더해, 남구청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맞춘 체계적 지역사회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전문가 집

단과 논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춘 방역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남구청은 선제적 지역사회 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민의 희생과 헌신에 앞서 주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재원과 권한을 적절적으로 투입,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위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협력단체원들과 마스크 현장배부 등 행정업무현장에서 도와주시는 통장님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숨은 영웅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재난 극복 위한 보육 정책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등록취소 건이 증가할수록 아동대비 교사비율을 맞추어 교사채용을 마친 일선 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지원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코로나19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야 아이들을 등원시킬 부모들의 입장과 재원율이 낮아질 경우 채용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어린이집의 양측의 상황을 모두 인지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장기 휴교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개학을 하더라도 감염 전파 우려로 등원시기를 고민하는 가정도 다수입니다. 언제 등원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연명별로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

거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휴교발생 상황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중복복합가 규정으로 인한 시설 미등록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재해 등의 사태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급 규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문제점에 대한 정책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봅시다. ‘코로나19 함께버티기 이겨낼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고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문제는 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뿐만 만족하지 말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